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가 제공하는
시장 정보

KITA Market Report

KITA Overseas Network | Tokyo, New York, Washington, Beijing, Shanghai, Chengdu, Brussels, Ho Chi Min, New Delhi, Jakarta

베이징지부 인턴 유진주 beijingk@kita.net 2019년 7월

중국의 상품추적시스템 구축 현황

〈목 차〉

Ⅰ. 개요
Ⅱ. 도입경과 및 주요정책
Ⅲ. 추진현황
Ⅳ. 시사점

〈요 약〉

□ 중국 정부는 상품추적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위조품 방지와 상품 품질 보장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 수호를 목표로 함

□ 식품,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 특수설비, 위험 물품, 희토류 제품 등 7대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점차 품목을 확대하는 추세임

□ 상품추적시스템 구축이 실현될 경우 소비자들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추적하고,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질 전망

□ 수출입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위주로 식품 등 주요상품에 대한 상품추적시스템 구축 추진 예정

□ 상품추적시스템 도입 범위에는 수입품도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에 소비재를 유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함

I. 개 요

□ 중국 정부는 상품 품질 보장과 소비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상품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통합 구축할 계획임

- 상품추적시스템이란 위조품 방지 및 상품 품질 보장을 위해 QR코드 스캔을 통해 상품의 생산, 출고, 유통, 구매 등의 전반 과정을 추적하는 플랫폼을 의미

- 지금까지는 농산품, 식품, 의약품, 농자재, 특수설비, 위험물품, 희토류 제품 등 7대 분야의 상품이 주요 대상이나, 점차 추적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임

- 중국 자국산 상품은 물론 수입 상품도 추적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있음

<table>
<tr><th>호주 벌꿀 추적</th><th>칠레 체리 추적</th></tr>
<tr><td></td><td rowspan="2">
</td></tr>
<tr><th>러시아 아이스크림 추적</th></tr>
<tr><td></td></tr>
</table>

*자료 : 중국검험인증그룹 추적서비스 플랫폼(www.ccic365.com)

Ⅱ. 도입경과 및 주요정책

□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시중의 위조 상품 범람, 상품품질 저하, 지재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

-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와 작년 7월에 발생한 장춘과 우한 지역의 불량백신사건 등을 겪은 후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제품에 대해 불신하고 맹목적으로 수입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

- 한편 중국은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 중이며, 짝퉁 제조국의 의미지에서 빠르게 벗어나고자 함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농산물, 식품, 의약품 등 분야에서 상품 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사례

- 식품 : 오바마 정부와 FDA 주도로 2011년 1월 4일 식품공급 안전성 보장 및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FSMA)'가 통과되었으며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으나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

- 약품 : 미국 의회가 2013년 11월에 제정한 DSCSA법(의약품공급망안전법, 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은 처방 약품을 식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구축 계획을 담고 있으며, FDA(미국 식품의약국)은 도매유통업자와 운송업체에게 2023년까지 규제 준수를 요구했음

※ 캐나다의 사례

- 식품 : 캐나다 식품검역청에서 올해 1월 15일부터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을 시행하여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도입

※ 일본의 사례

- 식품 : 2001년에 발생한 BSE(광우병) 문제를 계기로, 2003년 식품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듬해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어 제품에 소의 개체 식별 번호(로트번호) 표시를 의무화했음

□ 2015년 국무원이 상품추적시스템 구축을 언급한 이후 중국 상무부의 주도하에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농업농촌부, 국가응급관리부, 공업정보화부, 식약품감독관리국 등 부처와 지방정부가 상품추적시스템 구축 제도와 법규[1]를 연이어 발표

• 국무원의 주요 상품추적시스템 구축 가속화 의견 주요내용(2015)

□ **상품추적시스템이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기록하여 제품 추적, 책임 추궁을 실현하고, 전반 과정의 품질안전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는 유효한 조치임

• 기본 목표

– 2020년까지 추적시스템 구축 표준시스템과 법규제도를 한층 완비하고, 유관 기관과 지역, 기업의 추적정보 공유 실현

– 농산품, 식품, 의약품, 농자재, 특수설비, 위험물품, 희토류 제품 등 생산경영업체의 추적의식을 제고하고, 정보기술을 통해 추적시스템에 가입하는 기업 비중을 높이며, 소비자의 상품추적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추적시스템 구축 시장 환경을 개선

• 관련 법규

– 식품 안전법, 농산품 품질안전법, 의약품 관리법, 특수설비 안전법, 민용 폭발물 안전관리조례 등

• 대상 품목

– 농산품, 식품(영유아용 조제식품, 육류상품, 유상품, 식물성 기름, 백주 등, 자유무역시험구 수입 분유/와인), 농자재(농약, 수약, 사료, 비료, 종자 등), 의약품(약재, 한약 등), 특수설비(엘리베이터, 가스실린더 등), 위험물품(폭죽, 독성화학품 등), 희토류 제품 등 7大 품목

• 구축 주체 : 관련 업계협회, 생산경영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 관련 업계협회는 상품추적시스템 플랫폼 투자 및 구축을 통해 회원기업들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 생산경영업체는 법률법규에 따라 추적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도소매, 물류배송 등 유통업체는 생산업체와 추적시스템을 공동 구축

– 전자상거래 업체는 온/오프라인 통합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업체는 국내외 시장수요를 반영한 국내외 통합 추적시스템 구축

1) 대표적인 법규는 2015년 국무원에서 발표한「주요상품 추적시스템 구축 가속화 의견(국무원〔2015〕95호)」과 2017년 상무부가 발표한 「주요상품 정보화 추적시스템 구축 추진 지도의견(상무부〔2017〕53호)」 임

• 상무부의 주요상품 정보화 추적시스템 구축 추진 지도의견(2017)

• 기본 목표

–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상품추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주요 상품추적관리플랫폼 및 식용 농산품, 식품, 의약품, 농자재, 특수설비, 위험물품, 희토류 제품 등 분야의 상품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주요 내용

– 인터넷과 상품추적을 결합하여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상품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

– 생산가공, 창고물류, 도소매 등 기업의 추적시스템 구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스마트물류 건설을 통해 정보 공유, 온라인 거래, 맞춤형 마케팅 등 기능 강화

– 추적시스템과 도소매 기업이 전자결제시스템, 콜드체인 물류배송 등 시스템의 융합발전 추진

• 주요 구축 분야

① 농산품 : 국가 농산품 품질안전 추적플랫폼을 빠르게 구축하여 농산품 생산 경영업체를 관리하도록 추진, 육류/야채 추적시스템 완비

② 식품 : 영유아용 조제식품, 육류제품, 유제품, 식물성 기름, 백주 등 가공식품 위주로 생산가공업체가 추적시스템 및 관리제도 구축 추진, 점차 추적 대상 품목 확대

③ 의약품 : 중약재 유통추적관리 중앙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서로 다른 의약품 추적시스템 간 정보공유를 촉진. 모든 의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 전반 과정에 대한 추적 실현

④ 농자재 : 사료, 종자, 수약, 농약, 비료 등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

⑤ 특수설비 : 엘리베이터, 가스실린더, 이동식 압력용기 등의 생산, 사용, 유지보수, 검사, 폐기 등 정보 추적

⑥ 위험물품 : 민용 폭발물, 맹독성 화학물품, 폭죽, 방사성물품 등의 전 수명주기에 대한 상품추적시스템 구축 추진

⑦ 희토류 제품: 수출신고, 기업경영, 생산, 재고, 판매 등의 정보 추적

• 수출입 분야 구축 방안

– 자유무역시험구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위주로 식품 등 주요 상품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분야의 수출입 추적시스템 구축 추진

– 수출입 국가(지역), 원산지, 생산업체, 브랜드, 로트번호, 무역업체 혹은 대리상, 수화인, 수출입 및 판매 등의 정보와 통관/검역/라벨 등 정보를 통합하여 상품의 생산부터 수출입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식품, 의약품 생산경영자에 대한 추적시스템 건설(2016)

• 주요 내용

– 식품 생산업체는 원부자재의 구입, 생산, 검사, 판매 정보를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모두 기록

–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GMP, GSP 인증정보를 기록하고 사용업체는 '의료기구 의약품 감독관리법' 과 '의료기기 사용 품질감독관리방법' 에 따라 구입, 검수, 보관, 사용 등의 정보를 기록

– 화장품 생산업체는 '화장품 위생관리감독조례' 등 법규에 따라 생산, 품질, 유통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수입 상품과 특수용도 화장품, 영유아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

Ⅲ. 추진현황

□ (정부 플랫폼)상품추적시스템은 상무부 주관의 민생사업으로, 상무부 시장질서국이 '국가주요상품추적시스템(http://www.zyczs.gov.cn/)' 운영을 통해 정책안내 서비스 제공

* 금년 8월 10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도메인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도메인(zycpzs.mofcom.gov.cn)으로 바뀔 예정임

- 동 시스템에 육류·채소, 중약재 및 주류 등 3개 분야의 시범지역 카테고리를 설치하여 2010년부터 58개 도시에서 육류·채소 유통 추적, 2012년부터 18개 성과 시에서 중약재 추적, 4개 성에서 주류 추적시스템을 구축했음

- 상무부와 재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산둥, 상하이, 닝샤, 샤먼 등 시범 운영지역에서 식품, 의약품 등 분야에서 상품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개시했고,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상품추적시스템 구축 확대 예정

□ (민간 교류 협력) 한편 중국신용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12일 중국추적서비스산업연맹(中国追溯服务产业联盟)이 설립됨

- 동 연맹에서는 중국 QR코드 등록 인증센터(UTC China, www.idcode.org.cn), 중국 품질 인증센터(CQC, www.cqc.com.cn), 중국 상품 코드센터(GS1 China, www.ancc.org.cn)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상품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한 교류가 진행 중

- 동 연맹은 중국 QR코드 등록 인증센터와 함께 신청 기업에게 중국 추적 전용 도메인(.zsi.cn)을 지원해주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 '추적관리시스템', '전용 도메인' 3자 통합 실명인증 체제 구축

□ (중국 대기업 동향) 중국내 대표적인 택배물류 및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상품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택배물류회사 순펑그룹은 8개의 중국내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상품추적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티몰글로벌(天猫国际)은 수입 상품 추적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차이냐오(菜鸟) 물류와 협력하여 취렌루추적시스템(全链路溯源系统) 구축

- 징둥 그룹은 2017년 5월부터 상품추적관리 영역에 블록체인을 접목하여 2018년에 '블록체인식품안전연맹'을 세우고 추적 서비스를 확대

- 올해 4월에 발표한 징둥 블록체인기술 백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위조방지추적플랫폼 즈진리엔(智臻链, https://blockchain.jd.com)에서 식품, 주류, 분유, 일상용품, 의약용품 등 안전이나 품질에 민감한 분야의 700개 브랜드와 5만 개 분류(SKU) 제품을 대상으로 자체 상품추적시스템을 적용했음

- 쑤닝이꺼우(苏宁易购)는 지난해 온라인 쇼핑절(6·18)에 자체개발한 블록체인 상품추적시스템을 온/오프라인 점포에서 본격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상품의 생산, 가공, 운송, 유통, 판매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함

□ (플랫폼 현황) 최근 중국 정부기관 및 기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추적 플랫폼 구축

플랫폼	사이트	운영기관 및 특징	추적품목
중잰쑤왠 (中检溯源)	www.ccic365.com	중국검험인증그룹(中国检验认证集团, CCIC) 산하의 자회사이며, 글로벌 상품 추적 관련 해결방안을 제공	식품, 농산품, 소비재, 사치품 등 77개 품목, 천여종 상품
중국추적인증플랫폼 (CTT)	www.cttsys.cn	국가판권국의 승인을 받은 상품추적플랫폼. 한국에 운영본부를 설립	식품/축산물/야채/과일/수산물/콩제품/유제품/식용유/화장품 등
국가식품안전추적플랫폼	www.chinatrace.org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식품 품질안전 추적 사물인터넷 응용 시범사업, 정부/기업/소비자/제3자 기구가 사용	전국 31개 성급 플랫폼 데이터 관리감독
주류 유통 감독 통계 및 관리 플랫폼	http://jljcscyxs.mofcom.gov.cn/html/index.html	상무부가 주관하는 주류 분야 유통 추적 플랫폼. 마오타이, 우량예(五粮液), 고정(古井) 등 8개 기업을 중심으로 주류 분야 상품추적시스템 구축	쓰촨, 구이저우, 산둥, 안후이 4개 성의 8개 기업의 주류 유통
중치팡웨이 (中企防伪)	www.fangweibiao.org	2005년 북경에 설립된 위조방지/추적기술 플랫폼으로 5,000여개 기업과 협력, 레노버, 니콘, 삼성전자 등 대기업 포함	바이오의약품/보건식품/전자제품/건축자재/화장품/방직가죽제품/식품주류/도서/자동차부품 등
CCN중상 (CCN中商)	http://ccn.yesno.com.cn	2000년 상하이에 설립된 위조방지, 제품시장조사 등에 종사하는 컨설팅 회사로 46개 글로벌 500대 기업, 20여개 분야에서 1,200개 국내외 회원기업 보유	자동차부품/IT전자/의약품/의류//농자재/건축자재/식품/분유
치쉬엔&요툰 (齐炫&优豚)	www.youtun.com.cn	2003년 상하이에 설립, 16년간 브랜드 안전 분야에 종사, 위조방지, 상품추적, 공급체인 관리기술 등을 제공. 중국추적서비스산업연맹 제1기 회원사임	의료/식품/화장품/의류
마샹팡신 (码上放心)	www.mashangfangxin.com	알리바바그룹 산하 알리클라우드의 데이터 활용, '중국 상품품질 전자감독관리망' 과 '중국 의약품 전자감독관리망'의 상품추적 표준 도입	의약품

*자료 : 베이징지부 자체 정리

Ⅳ. 시사점

□ 현재 중국은 상무부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상품추적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향후 추적 품목을 점차 확대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정책 관련 문건 발표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과 업계협회에게 플랫폼 구축 및 가입을 권장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상품추적시스템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

- 상품추적시스템 도입에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상품 품질 보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 수출입 분야에서도 중국 상무부가 향후 자유무역시험구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주로 식품 등 주요 수입 상품에 대해 상품추적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 (2017년 2월)

□ 현재 중국내에 다양한 상품추적플랫폼이 있으며, 일부 한국에 진출한 상품추적시스템도 있음

- 중국 국가판권국의 인정을 받은 제3자 상품추적플랫폼 중국추적인증 플랫폼(CTT)은 한국씨티티(http://cttsys.kr)라는 운영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9년 7월 1일 기준 한국씨티티 가입 회사는 849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미비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지만, 중국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수출입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아 소비재를 중국에 유통하려는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함

- 상품추적정보를 활용할 경우 기업들은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위조 상품과 품질 저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음

- 향후 동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경우, 대형 마트나 단체기관이 추적 가능 상품을 우선으로 구입하는 등 상품추적시스템 적용 상품의 판매가 유리해질 수도 있음